

광산구 2억 약속 발뺌에...국비 29억 반납 위기

“재정 어렵다”며 평동중 다목적강당 투자 1년째 미뤄

체육공간 설립 허사 우려...학생·주민에 피해 고스란히

광주 광산구가 평동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사업의 대응투자를 꺼리면서 이미 확보한 국비 29억4500만원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광산구의 대응투자비는 1억9700만원으로, 이를 투자하지 않아 15배에 달하는 29억4500만원을 놓칠 상황이다.

26일 광주시의회 이정현 의원에 따르면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총 사업비 39억6967만원을 들여 지상 2층 규모의 평동중 다목적강당 증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다목적강당은 연면적 4235.87㎡로, 강당과 급식실, 특별교실(과학·기술·음악·미술·가사 실습실) 등이 갖춰진다. 다목적강당이 지어지면 전국에서 관심

을 갖는 특성화중학교인 평동중의 도약과 평동지역 주민·평동산단 근로자들의 휴식 및 체육활동 공간으로 활용된다. 특히, 급식실이 없어 인근 평동초교에서 가져와 급식을 하는 평동중은 급식 불편도 말끔히 해소된다.

하지만, 사업비 확보에 문제가 생기면서 사업이 좌초될 위기다.

총 공사비는 39억6967만원 중 교육부 특별교부금 29억4500만원과 교육청 예산 6억2707만원이 확보됐지만 지자체 대응투자비 3억9760만원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자체

대응투자는 의무사항으로, 광산구가 지원을 하지 않으면 이미 확보한 예산에 대해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당초 이 사업은 광산구의 대응투자를 확인받고 추진됐다.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광산구는 평동중학교에 공문을 보내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는 대응투자비를 지원할 수 없는 실정이나, 지역사회 교육 발전과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평동중에서 지원 요청한 대응투자액(20%)에 대해서는 광주시 특별교부금 지원 건의 등 별도 지원대책을 적극 강구해 지원하고자 한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 광산구는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응투자를 꺼리고 있다.

이 같은 사정에 놓이자 김동철 국회의원과

과 이정현 광주시의원 등이 중재에 나서 대응투자비 3억9700만원 중 2억원을 광주시가 보조하기로 했다. 그러나 광산구는 나머지 1억9700만원마저 투자할 수 없다고 발뺌해 이미 확보한 교별교부금 29억4500만원을 반납해야 할 형편이다.

광주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다음달 초 국비를 반납해야 한다”며 “광산구에 이달 말까지 대응투자 여부를 확정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정현 광주시의원은 “광주시가 광산구의 대응투자비 3억9700만원 중 2억원을 보조해주시기로 했는데 나머지 1억9700만원마저 투자하지 않는다는 건 무책임하고 행정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며 “이는 고스란히 광산지역 학생과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5·18기념재단 노조원 부분 파업 예고 20여일 남은 35주년 행사 차질 우려

계약 종료 직원 2명 해고 반발

5·18 기념재단 노사가 직원 재계약 문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노조원들이 5·18 민중항쟁 35주년 기념행사(이하 35주년 기념행사)를 20여 일 앞두고 부분 파업을 진행키로 하면서 35주년 기념행사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 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26일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5·18 기념재단지회에 따르면 다음달 16일부터 5월 27일까지 광주·전남, 서울 등 전국에서 광주인권상·5·18 사진전 및 전국교사연수(역사를 말한다)·레드페스타·5·18 진실알리기 대학생홍보단 운영 등 35주년 기념행사를 주관한다.

그러나 35주년 기념행사 일부를 주관하는 5·18 기념재단지회가 오는 30일부터 부분 파업에 나서기로 하면서 35주년 기념행사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35주년 기념행사를 맡고 있는 담당 직원들이 순차적으로 행사에서 손을 떼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사측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직원 2명의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과

관련, 27일부터 출근(오전 8시30분~9시30분)·점심시간(정오~오후 1시) 선전전을 시작으로 30일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가는 등 파업 수위를 점차 높여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또 사측의 근로기준법 위반·단체협약 위반·근무평가제 미실시 등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청구 및 법적 대응도 할 방침이다.

이들이 예정대로 부분 파업에 나설 경우 35주년 기념행사는 차질을 빚게 될뿐 아니라 각종 민주·인권사업을 진행하면서 도 정작 5·18 기념재단은 민주·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계약종료를 이유로 근로자 2명을 해고한 것은 전임 이사들의 재단 운영방식에 불만을 토로한 직원들을 압박하기 위한 폭력행위에 불과하다”며 “비정상적으로 자행돼 온 관행들을 바로 세우지 않고 간다면 5·18 기념재단은 어떤 희망도 말할 수 없다. 재단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행기자golee@kwangju.co.kr

또 기아차 채용 미끼 사기

4000만원 가로챈 40대 구속

기아차 광주공장 채용을 빙자해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4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 1부(부장검사 조재연)는 26일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월께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 채용시켜줄 수 있다며 구직자 측으로부터 일선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아 갹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미 광주시청에 취업시켜주겠다고 1800만원을 받아 갹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지역 B역 위원회 부위원장이면서 광주시 시민감사관,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활동하며 지난 2008년에도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율기자 dok2000@



봄꽃에 빠진 여심 26일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봄꽃박람회 개막을 하루 앞두고 열린 사전 공개 행사에서 관람객들이 봄꽃을 구경하며 웃음 짓고 있다. 광주 봄꽃박람회는 오는 2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pm 6:30 광주시 저자거리'를 주제로 개막해 다음 달 5일까지 열린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나노바이오연구원 직원

“당시 원장에 금품 건넸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장성 나노바이오연구원의 기가지 제 납품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수년 간 독점 공급하는 대가 명목으로 금품 등이 오갔다는 의혹과 관련, 연구원 직원 A(54세) 수사에서 납품업자로부터 받은 금품 일부를 당시 연구원장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관련자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당시 원장이었던 이씨의 광주시 비서실장에 대한 소환 여부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세림이법’ 시행 한달...원칙만 지켰어도

광주서 통학버스 급제동에 세살배기 사망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이른바 ‘세림이법’이 시행됐지만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관련법 강화 뿐 아니라 보육기관 종사자들의 안전 의식 및 책임감 강화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거세다.

지난 24일 오전 9시40분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 안 도로에서 25인승 어린이집 통학버스를 운전하던 윤모(63세)가 갑자기 급제동을 하면서 하차를 앞두고 보육교사에게 안겨 있던 A(3)군이 튕겨나

가면서 머리를 다쳤다.

A군은 다음날 뇌출혈로 사망했다. 보육교사 등은 어린이집 도착을 앞두고 A군이 보채는 것을 달래면서 하차시키기 위해 안전벨트를 풀고 안고 있다가 사고가 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사고 통학버스는 경찰에 등록된 차량으로 운전자도 교통안전공단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씨가 앞선 차량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맞은편 차선을 이용하려다 마주오는 차량을 발견, 급제동하면서 사

고가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충북 청주에서 김세림(당시 3살)양이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뒤 어린이 통학 차량에 대한 안전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통학 차량 신고 및 성인 보호자 동승, 어린이집 운영자 등의 안전교육 강화를 포함한 ‘세림이법’을 통과시켰지만 이번 사고로 제도 정비 외에 보육기관 종사자들의 안전 의식 강화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주 어린이 통학차량은 모두 2931대로 이중 신고를 마친 차량은 69.26%인 2030대다.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광주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모두 1560건(사망 6명·부상 1955명)이다. /이종행기자golee@

검찰, 중흥건설 추가 압수수색

순천 신대지구 개발 관련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 박차

검찰이 순천 신대배후단지 개발사업과 관련,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된 중흥건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5일 중흥건설 대표와 회계 관계자 등 자택 3곳, 계열사인 나주관광개발, 본사 경리부 등 5곳에 대한 수색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중흥건설 본사와 일부 계열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검찰은 세무서 직원을 포함한 검찰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확보한 서류 등에

대한 정밀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앞서 중흥건설이 개발지구 공공시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규모”라는 말이 나오면서 수사가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신대지구 개발 과정에서 공공용지의 용도를 변경해 전역원 대의 특혜를 준 혐의를 받은 공무원과 해당 개발사업사 대표를 각각 구속한 바 있다. /순천=김은중기자 ejkim@

불법 주차 시비끝 주먹다짐한 남녀 나란히 경찰서행

○...상가 불법 주차 문제로 시비 끝에 주먹다짐을 한 남녀가 경찰서행.

○...26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김모(여·45)씨는 지난 25일 오전 10시30분께 광주시 동구 학동 남광주시장 박모(35)씨의 그릇 상점 앞에 허락없이 주차를 한 것으로 말다툼을 하다 서로 얼굴

을 때렸다는 것.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를 해봤지만 멍통이어서 상인회를 통해 방송을 한 뒤에야 차 주인을 찾을 수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김씨는 “차에 연락처를 보일 수 있게 두고 갔다. 오해가 있다”고 옥신각신.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경매투자

▶특수비법 배우실 분
교육비 / 임정활동비
사무실 사용료(1년) 등
2200만원

▶단독 / 공동투자 하실 분
자본금 - 1억원 이상
수익률 - 연 20% 이상

(주)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

화순 “전원주택지” 매매

- 화순군(읍) 다지리 산 12-7번지
- 임야 328평 ■ 33필지중 1필지
- 광덕교차로에서 5분거리
- 기반시설 조성중(화순군청) 2015년 5월 완공 예정
- 투자기회 좋음
- 매매가 - 1억 3120만원 (평당 40만원)

주인직매 H. 010-3605-5000

- 광주 월산동 110-18번지
- 5층 중 2층 34평
- 정남향, 2013년 신축
- 방 3, 화장실 2, 거실
- 내부 깨끗, 첫 입주, 즉시 입주가능
- 신우 APT 105동 옆
- 감정/시세 - 1억 9000만원
- 매매 - 1억 6400만원(대출 1억 1천만원 포함)

월산동 “광전파크” 빌라

주인직매 H. 010-3605-5000